

#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 제2소위원회

### 심의 · 의결

안 건 번 호 제2024-215-541호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  
피 심 인

의결연월일 2024. 7. 24.

## 주 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유출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 가능성이 있는 시점과 그 경위’,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를 피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보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및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유출 대응체계 구축, 피해 최소화 및 긴급 조치,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등

※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대응 매뉴얼」(2023.9.) 참고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http://www.privacy.go.kr)) → 자료 → 자료보기(지침자료)에서 검색 가능)

다. 가. 및 나.의 개선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고,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이 유

## I. 기초 사실

피심인은 온라인으로 유사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 하는 「  
舊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sup>1)</sup>(이하 ‘舊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및 「舊 개인정보 보호법」<sup>2)</sup>(이하 ‘舊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피심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종업원 수 (명)

## II. 사실조사 결과

###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서울경찰청에서 피심인의 개인정보 유출 발생 사실을 통  
보(‘22. 2. 15.)해움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 및 舊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  
사(‘22. 7. 6. ~ ‘24. 3. 18.)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2. 행위 사실

####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1) 법률 제16021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6. 25. 시행  
2)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피심인은 온라인으로 유사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23. 4. 14. 기준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구분	항목	기간	건수
계			

####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해킹('20. 4.) 당시 홈페이지 운영사와의 계약 종료('21. 12.)로 해킹 이전 수집한 개인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이 확보한 자료(해커 보유 자료)와 피심인이 보유한 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개인정보 유출 여부 파악이 불가하였다.

### 3. 개인정보의 취급.운영 관련 사실관계

#### 가.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사실

경찰 참고인 조사 시('21. 11. 15.)\*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점, 해커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유출 통지 및 신고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경찰 참고인 조사 시 피심인으로부터 해커 보유 자료와 실제 고객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유출 여부를 확인했으므로 참고인 조사 시점을 인지 시점으로 판단

### Ⅲ. 위법성 판단

#### 1. 관련법 규정

가.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제4호),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sup>3)</sup>(이하 ‘舊 시행령’이라 한다) 제48조의4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4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2. 위법성 판단

### 가.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사실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피심인이 유출 통지·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는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

## IV. 개선권고(안)

---

3) 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2022. 10. 20. 시행

피심인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sup>4)</sup>(이하 '보호법') 제6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의 실태를 개선하도록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유출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 가능성이 있는 시점과 그 경위',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를 피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보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및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유출 대응체계 구축, 피해 최소화 및 긴급 조치,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등

※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대응 매뉴얼」(2023.9.) 참고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http://www.privacy.go.kr)) → 자료 → 자료보기(지침자료)에서 검색 가능)

다. 가. 및 나.의 개선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고,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4)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7월 24일

위 원 장     김 진 욱     (서 명)

위     원     김 진 환     (서 명)

위     원     박 상 희     (서 명)